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벼랑(CLIFF) 끝 위기의 한국 청년

# 목 차

## ■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벼랑(CLIFF) 끝 위기의 한국 청년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 .....	2
3. 시사점 .....	10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   오 준 범 선 임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벼랑(CLIFF) 끝 위기의 한국 청년

#### ■ 개 요

국내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청년층의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현상을 5가지 특징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

**(일자리 소외 : out of Collar)** 청년층은 취직 및 창업 등 일자리 전반에 걸쳐 참여하기가 어렵다. 청년들은 대학 입학 후에도 휴학을 많이 하고 있으며, 휴학 사유 중에서도 ‘취업 및 자격 시험 준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청년층 취업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어려우며, 특히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더욱 좋지 않다. 연령별 인구수 대비 취업자수 비중을 보면 30세 이상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확대되지만, 3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답보 상태이다. 청년들의 창업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창업하더라도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채 증가 : Loan increased)** 부채 증가, 재무건전성 악화 및 1인당 대출 연체 잔액 증가 등 청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0세 미만 청년가구주의 부채가 급증하였다.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2년 5,450만 원에서 2016년 7,022만 원으로 약 29% 증가했지만, 동기간 30세 미만 청년층의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는 1,283만 원에서 2,385만 원으로 약 86% 증가했다. 고용 부진으로 소득 역시 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비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학생 1인당 대출액은 감소세이지만, 1인당 연체잔액은 여전히 490만 원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소득 감소 : Impoverished)** 청년가구주의 소득 자체가 감소했다. 30세 미만의 청년가구주 경상소득은 2013~2014년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3,279만 원을 기록하였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채용은 확대되지만, 비정규직에서의 전체임금 대비 29세미만임금 비율로 평가한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임금 수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년층의 빈곤이 부모 세대까지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고용 및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이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령층의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득없는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 세대들이 취업하지만, 소득 수준이 '화이트칼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노무종사직'의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다.

**(소비 제약 : Frugal)**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거비 및 부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교육, 오락·문화, 주거 부문의 소비지출은 증가했지만, 식료품, 가정용품, 보건 등의 부문의 소비지출은 감소했다. 식료품 및 가정용품 등 생필품 부문에서의 청년가구 소비감소폭은 전체가구의 소비감소폭보다 더 컸다.

**(피로 가중 : Fatigue)** 청년층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구직 활동에 전념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학업이 아닌 곳, 예를 들면 취업용 '스펙쌓기'에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 또한 구직을 위해 몰려드는 주요 도시의 청년층 주거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충분한 휴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청년들은 오랜 취업 준비, 경쟁 심화 등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 : 벼랑(CLIFF) 끝 위기 >

<b>out of Collar</b>	취직 및 창업 등 일자리 참여 소외
<b>Loan increased</b>	부채 증가, 재무 건전성 악화, 연체 증가 등 채무 부담 가중
<b>Impoverished</b>	청년층 및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 세대의 소득 감소
<b>Frugal</b>	소비지출 감소. 특히 기본 생필품 소비지출 감소
<b>Fatigue</b>	학교활동 이외 학습 시간 증가, 주거시설 취약, 스트레스성 질환 증가

■ 시사점

지속적인 경제 성장,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 완화 및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벼랑 끝 위기의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직업 훈련 및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둘째, 청년 맞춤형 채무 조정 개선 방안 및 금융 교육 등을 도입·확대해야 한다. 셋째,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휴식 및 스트레스성 질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 1. 개요

- 국내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청년층은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로막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수록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 및 사회적 비용 부담 가중 우려
  - 국내 경제성장률은 2% 중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성장세가 회복되는 경우에도 내수보다는 수출 경기에 의존한 모습
    - 2017년 이후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국내 수출 증가 및 정부 지출에 기인한 점이 커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
  - 청년층의 경제 활동이 제약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사회적 비용 부담도 증가
    - 고용 여건 악화, 부채 부담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층은 사회 진출이 늦어짐
    - 장기 실업 등 청년층의 사회 진출 지연은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장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 결혼 및 출산 역시 지연되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악화
    - 저출산·고령화 악화는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재생산을 제약할 우려
-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현상을 5가지 특징을 ‘벼랑(CLIFF) 끝 위기’로 제시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 : 벼랑(CLIFF) 끝 위기 >

<b>out of Collar</b>	취직 및 창업 등 일자리 참여 소외
<b>Loan increased</b>	부채 증가, 재무 건전성 악화, 연체 증가 등 채무 부담 가중
<b>Impoverished</b>	청년층 및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 세대의 소득 감소
<b>Frugal</b>	소비지출 감소. 특히 기본 생필품 소비지출 감소
<b>Fatigue</b>	학교활동 이외 학습 시간 증가, 주거시설 취약, 스트레스성 질환 증가

## 2.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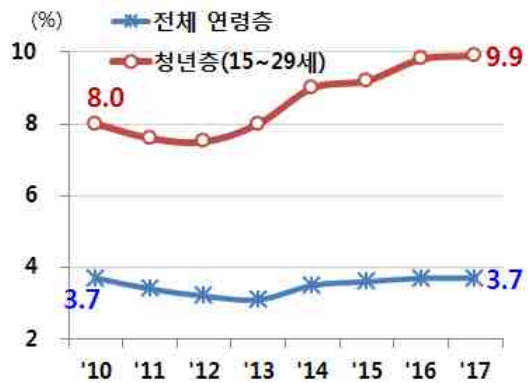
○ (일자리 소외 : out of Collar) 저성장 및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청년층은 취직 및 창업 등 일자리 전반에 걸쳐 참여가 어려워짐

- 대학 입학 후에도 휴학을 점차 많이 하고 있으며 휴학 사유도 '취업 및 자격 시험 준비'가 빠르게 증가
  - 대졸자 중 휴학을 경험한 인원은 2010년 115만 명에서 2017년 130만 명으로 증가함
  - 휴학 사유 중 다른 사유는 대체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한데 비해 '취업 및 자격 시험 준비' 비중은 2015년 20.2%에서 2017년 30.1%로 대폭 확대됨
- 청년층 취업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어려우며, 특히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
  - 전체 실업률은 2010년 이후 3%대에서 등락하지만,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동 기간 7%대에서 9%대 후반으로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고 상승폭도 큼
  - 2017년 15~29세의 청년 체감실업률<sup>1)</sup>은 22.7%로서 청년층의 공식실업률(9.9%) 및 전체 연령층의 체감실업률(11.1%)의 두 배 이상임

< 청년 휴학 사유 비중 >



< 전체 연령층 및 청년층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주1) 휴학 사유 중 병역의무이행은 70~75%, 기타는 4~1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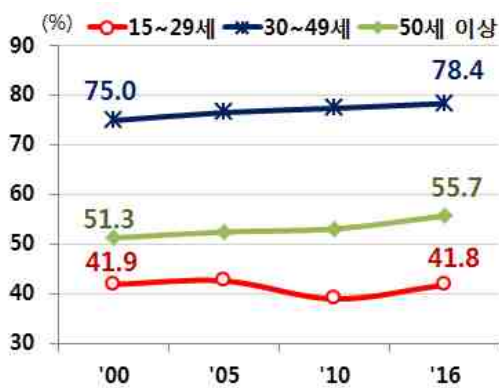
2) 휴학 사유 응답은 복수응답으로 구성비 합이 100%를 넘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1)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한 고용보조지표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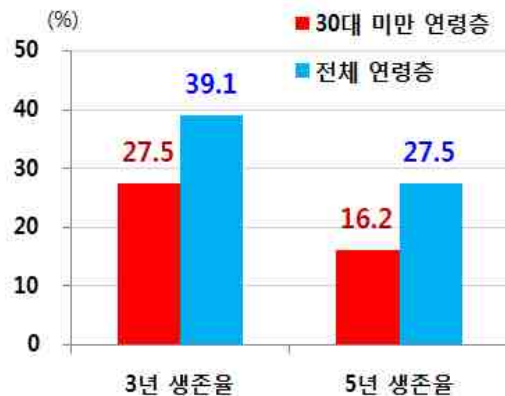
- 30세 이상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확대되는 데 비해 그 이하 연령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답보 상태
  - 15~29세 연령대의 인구수 중 취업자수 비중은 42%로 그 이상 연령대의 인구수 중 취업자수 비중(30~49세의 50%대, 50세 이상의 70%중후반)에 비해 낮음
  - 30세 이상 연령대의 인구수 중 취업자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15~29세 연령대의 인구수 중 취업자수 비중은 40% 초반에 머물
  - 전체 취업자 중에서도 29세 이하 취업자 비중은 1995년 36.4%로 전체 고용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축소되면서 2015년은 18.0%로 20%대를 하회함<sup>2)</sup>
- 청년 창업은 활성화되었지만 창업하더라도 생존에 어려움
  - 한국의 25~34세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 중 창업 42개월 이내의 신생 기업 비율을 의미하는 '초기창업활동비율(Total early-stage Entrepreneurship Activity : TEA)'은 2016년의 4.7%에서 2017년에는 12.8%로 큰 폭으로 상승함<sup>3)</sup>
  - 2015년 기준 30대 미만 연령층 기업의 생존율<sup>4)</sup>은 전체 연령층 기업의 생존율에 비해 2/3 수준으로 낮음

< 연령별 인구수 대비 취업자수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총조사'.

< 30대 미만 및 전체 연령층의 기업 생존율(2015년) >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주 : 대표자 연령 기준.

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5월, '산업 일꾼들이 늙어간다', 경제주평 통권 743호.  
 3)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GEM 2016/2017 Global Report』, pp123.  
 | 『GEM 2017/2018 Global Report』, pp120.  
 4) 예를 들어 '3년 생존율'은 3년전에 새로 설립한 신생기업 중 해당연도까지 생존하여 활동중인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용어 설명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부채 증가 : Loan increased) 부채 증가, 재무건전성 악화 및 1인당 대출 연체잔액 증가 등 청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

-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가 급증

- 전체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2012년 5,450만 원에서 2016년 7,022만 원으로 28.8% 증가함
- 동 기간 동안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 부채 규모는 1,283만 원에서 2,385만 원으로 85.9% 증가함
- 동 기간 동안 전체가구 부채 규모 대비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 규모 비율은 23.5%에서 34.0%로 확대됨

- 고용 부진으로 소득 역시 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면서 부채는 증가하여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 전체 가구의 대출원리금/가처분소득 비율은 상승세이지만,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함
- 30세 미만 청년가구주의 대출원리금/가처분소득 비율은 전체가구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2012년 10.7%에서 2016년 14.0%로 상승세가 지속됨

< 청년가구주 부채 >



< 청년가구주 재무건전성 (대출원리금/가처분소득)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1) 청년은 30세 미만을 의미함.

2) 1가구당 평균 부채 수준 기준 비교.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1) 청년은 30세 미만을 의미함.

2) 1가구당 평균 부채 수준 기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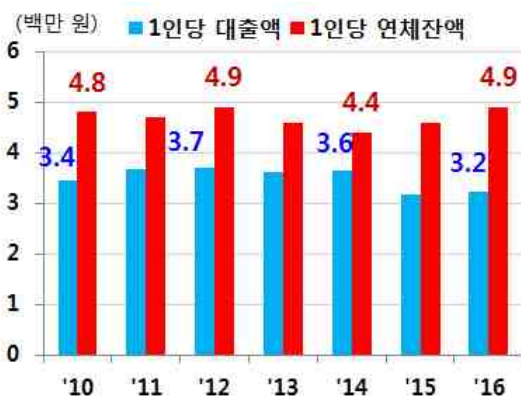


-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1인당 대출액은 감소세이지만, 1인당 연체잔액은 오히려 증가
  - 학생들은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제도를 많이 이용하면서 학자금 대출 총규모는 2010년 2조 8,673만 원에서 2016년 1조 9,809만 원으로 감소함
  -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2년 370만 원에서 2016년 320만 원까지 감소함
  - 2012년 이후 학자금 대출 연체잔액 및 연체인원은 줄었지만<sup>5)</sup>, 1인당 연체잔액은 여전히 490만 원 수준임

○ (소득 감소 : Impoverished) 취업난으로 30세 미만 청년가구주의 소득은 감소하고, 청년층의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이 이를 부양하는 고령층에까지 전이

- 30세 미만의 청년가구주의 소득은 2015년 감소한 이후 회복 정체
  - 30세 미만의 청년가구주의 경상소득은 2015년에 전년대비 4.1% 감소한 3,266만 원을 기록. 2016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279만 원에 머물
  - 특히 2015~2016년간 조세 및 사회연금 등 비소비지출은 늘어나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줄었음<sup>6)</sup>

< 1인당 학자금 대출액 및 연체잔액 >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6통계연보」.

< 청년가구주 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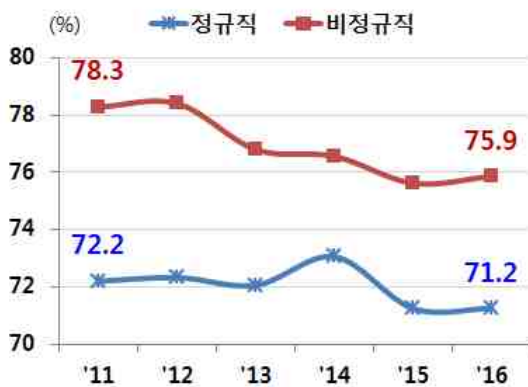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1) 청년은 30세 미만을 의미함.  
 2) 1가구당 평균 소득 수준 기준 비교.

5) 학자금 대출 연체잔액은 2012년 5,899억 원에서 2016년 3,867억 원으로 감소, 연체인원은 2012년 12만 527명에서 2016년 7만 9,288명으로 감소(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6통계연보』).  
 6) 2015~2016년간 30세미만 가구주의 비소비지출은 443만 원에서 465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2,823만 원에서 2,814만 원으로 감소.

- 비정규직 부문에서 청년 채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전체임금 대비 청년층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큼
  - 신규 채용된 청년(15~29세)층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54.1%에서 2015년 64.0%로 확대되고 있음<sup>7)</sup>
  - 정규직 부문에서는 전체임금 대비 청년층임금 비율이 2011년 72.2%에서 2016년 71.2%로 소폭 하락함
  - 그러나 비정규직 부문에서는 전체임금 대비 청년층임금 비율이 동기간 78.3%에서 75.9%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함
- 고용 및 소득 부진을 겪는 청년층이 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 역시 증가하고 이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령층의 소득은 감소
  - 청년층 본인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쉼거루족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sup>8)</sup>
  - 60대 이상의 취업자수는 2015~2016년 동안 366만 명에서 388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동기간 이들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283만 원에서 281만 원으로 감소함
  - 고령층은 '화이트칼라'가 '단순노무종사자'로 대체되면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악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sup>9)</sup>

<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청년 임금 수준(29세미만임금/전체임금)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 연령대별 가구의 평균소득 변화(2015~2016년)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전국 2인이상 가구 기준.

7) 김복순·정현상, 2016년 1월, '최근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변화', 「월간노동리뷰」 pp. 91~108, 한국노동연구원.  
8) 월평균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 취업자의 쉼거루족 비율은 81.9%임에 비해, 월평균소득 301만 원 이상 고소득 청년 취업자의 쉼거루족 비율은 12.0%에 그침(자료 : 오호영, 2017년 12월, '쉼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p15).  
9)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7월, '고학력 베이비부머와 고령층 일자리의 해부'.

○ (소비 제약 : Frugal)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감소

-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이 2013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

- 30세 미만의 청년가구 소비지출은 2011년 연간 약 1,959만원에서 2013년 2,299만원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2016년 1,869만원으로 축소됨
- 2016년 전체가구 대비 청년가구 소비지출 비율은 71.9% 수준이며, 2013년 이후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 이는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주거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청년가구는 교육, 오락·문화, 주거 부문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한 반면, 식료품, 보건 등 부문에서는 소비가 감소

- 청년가구는 교육, 오락·문화 등 자기계발 관련 소비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가구의 교육, 오락·문화, 주거의 소비증가율은 전체가구의 소비증가율 상회한 반면, 가정용품과 보건에 대한 소비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음

<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



< 청년가구의 품목별 소비증감률(2011~2016년)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1) 청년은 30세 미만을 의미하며, 표본수가 다소 작음에 유의.

2) 1가구당 평균 소비 수준 기준 비교.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1) 청년은 30세 미만을 의미하며, 표본수가 다소 작음에 유의.

2) 2011~2016년간 연평균증가율.

○ (피로 가중 : Fatigue) 청년층은 오랜 구직 기간으로 인한 학업 시간소비 증가, 주거 환경 취약, 스트레스성 질환 증가 등으로 피로가 가중

- 국내 청년층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미취업 상태로 구직 준비를 하는 청년이 증가

· 청년미취업자는 2011년 5월 약 140만 9천 명에서 2017년 5월 약 147만 2천 명으로 증가함

· 이 중 1년 이상 미취업자는 2011년 5월 약 62만 6천 명에서 2016년 65만 4천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1년 이상 미취업자 비중은 2011년 44.4%에서 2012년 40.7%로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2017년 5월까지 44.4%로 증가함

- 구직이 어려워지고 장기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증가하면서 청년의 학교활동 이외의 학습 시간이 크게 증가

· 1999년 청년층의 학업 시간소비는 학교활동과 학교활동외학습이 모두 일 평균 41분을 기록함

·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학교활동보다는 학교활동외학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학교활동이 일평균 33분에 그친 반면, 학교활동 이외 학습은 73분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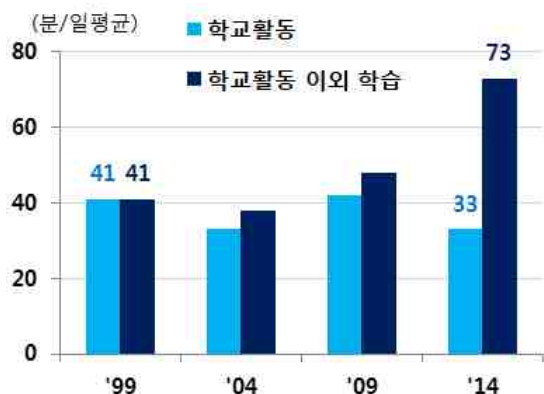
· 이는 일명 취업용 ‘스펙쌓기’를 위해 학생들이 학교활동 이외 학습에 더욱 치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청년의 장기미취업 현황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의 학업 시간소비 현황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 2009년 이전 조사의 학교활동외 학습은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과 일반인의 학습시간의 합임.

- 한편 청년들이 구직을 위해 몰려드는 주요 도시의 청년층 주거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거시설에서도 충분한 휴식은 불가능
  - 국내 주요 도시의 청년층 주거빈곤율<sup>10)</sup>은 평균 약 15%로 청년들의 주거이용 실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주거빈곤율이 30%에 육박하고 있고, 다른 도시, 세대에서 주거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울 1인 청년가구는 2000년 이후 주거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sup>11)</sup>
  - 이는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도시에서의 임차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주거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의 오랜 취업 준비, 경쟁 심화 등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 환자수가 급증
  -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발병은 중장년층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 청년층 환자가 급증함
  - 2012~2016년간 국내 청년층 인구 10만명 당 우울증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전체 세대의 1.6%를 상회함
  - 또한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질병도 인구 10만명 당 환자수는 중장년층에 비해 적지만, 최근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임

< 주요 도시의 청년층 주거빈곤율(2015년) >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주 : 주거빈곤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주택이외 거처 가구를 포함한 개념임.

< 청년층 주요 질병 환자수 >



자료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주 : 20~29세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

10) 주거빈곤율은 전체가구 대비 주거빈곤가구 비율임. 주거빈곤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주택이외 거처 가구를 포함한 개념임.

11) 이원욱 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

### 3. 시사점

○ (시사점) 지속적인 경제 성장, 심리적 불안 완화 및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청년층 고용, 부채, 소득 악화 등의 문제 해결 노력

- 청년층 흡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실질적인 직업 훈련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부응
  - 양질의 일자리,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갖고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이 확대될 수 있는 소득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청년층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창출되어야 함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비정규직의 고용 조건이 정규직과 차별화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직업중심 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등 직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재 양성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함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육성 및 기업 현장 경험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고졸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 강화
  
-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부채 부담으로 인해 경제 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년 맞춤형 채무 조정 개선 방안 및 금융 교육 등의 도입 및 확대
  - 부채 경감 및 신용 회복 대책이 노숙인 및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신용 회복은 소외되는 점을 감안하여 더 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 회복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이미 발생한 부채에 대한 처리 방법(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위주의 금융 상담 및 교육과 함께, 금융상품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방에도 초점을 맞춘 금융교육이 시급함
  - 청년층의 부채 역시 주거, 노동 등 다른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 조사 및 심층인터뷰 등의 복합적인 실태 조사에 근거한 통합적인 채무 조정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청년층의 소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의 부담 완화
  - 청년층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래 소득 등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청년 취약계층의 이자비용 상승이 소비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휴식 및 스트레스성 질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 최근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 등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의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 적용하고, 대학생, 미취업청년, 1인가구 등 청년의 특성별 맞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청년층이 스트레스성 질환 등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적 캠페인을 확대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빠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HRI**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오준범 선임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